2012년
8월 29일
제26호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월간 발전노동자
발행인:신현규 | 주소:서울시 강남구 대치동999-6대동빌딩5층 | 전화:070-4048-5991 | 팩스:070-7500-8158 | 홈페이지:http://baljeon.nodong.net | 이메일:baljeon@baljeon.nodong.net

연봉제 합의! 발전노조는 적용 안된다?

동서노조가 회사와 연봉제 도입에 합의 했다는 동서발전의[2011년도 경영평가 결과보고서]가 공개되어 현장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해당 동서노조와 회사는 이렇다 할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그 의문을 증폭시키며 사실에 힘을 실어 주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2011년도 연봉제 합의가 발전노조원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이유는 두 가지로 요약 될 수 있다. 우선 발전노조는 임금협상을 별도로 체결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여 발전노조가 2011년도 당시 임금 협상권을 가지고 있었고, 별도 임금협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발전노조에는 효력을 미치지 않는 다는 것이다. 또한, 발전노조가 단체협약을 별도로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서의 경우 별도로 임금협약을 하면서 동서노조가 연봉제 도입에 합의를 했기 때문에 동서노조 조합원들에게만 연봉제 도입이 적용된다.

그렇다면 2012년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2012년도 1월 5개사가 동시에 진행한 교섭대표노조 지위 획득 등에 관련한 공고 당시 발전노조는 참여하지 않았다. 창구단일화 절차를 통한 교섭대표노조 지위의 취득 절차는 발전노조 단협 만료 3개월 전(2012.12경)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위법이라는 해석 때문이다. 이것은 '2011년 7.1 현재 교섭중인 노조는 교섭대표노조로 본다'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4조'에 대한 해석과 관련 된다.

또한, 발전노조는 별도의 단체협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섭대표노조가 임금 협정 등을 체결하더라도 2012년에는 '일반적 효력확장'이 적용 되지 않는다. 따라서 그들이 주장하는 교섭대표노조가 2012년 임협 등에서 '연봉제'도입에 합의해도 발전노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심지어 기업별 노조의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인정했을 경우에도 2012년에 체결한 임금 협상의 적용 대상은 당연히 일부로 한정 된다.

그러나 2013년은 상황이 달라진다.

상기의 관련 법률에 따른 법적 판단이후에 2012년 12월 이후 발전노조가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발전노조가 별도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에는 발전노조도 연봉제 도입을 막는 것은 불가능 할 지도 모른다.

결론적으로 연봉제 도입에 명확하게 반대하는 노동조합이 과반수를 확보하고 있어야 그나마 연봉제 도입 저지의 해결점을 찾을 여지가 생기는 것이다.

그런데, 연봉제가 얼마나 무섭고 치명적인 것인지 발전노동자들은 아직도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여 너무나 안타깝다.

일단 연봉제가 도입되면 초 년도에는 연봉이 많게는 7~8%까지도 상승한다. 그러나 이것은 임금체계를 바꾸면서 일어나는 착시 현상에 불과하다. 물론 초기에 연봉제 도입을 유도하기 위한 회사와 정부의 '당근'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KT의 10년간의 사례처럼 '연봉제'는 현장 노동자들의 임금을 반 토막까지도 날려 버리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 왔다. 매년 임금협상을 통해 임금인상을 해도 회사의 임금 예산은 항상 남아돌았다고 전해진다. 앞으로는 멀리 갈 것도 없이 발전사에 도입된 '간부들의 성과연봉제'가 2012년도부터 본격화되면 더욱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 직원 연봉제'가 도입되기 전까지는 간부들의 연봉제도 '초기단계'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은 정부의 계획안에 명시된 것이라 쉽게 예측할 수 있다.

게다가 동서의 사례에서처럼 연봉제 도입 과정 중 정말 공포스러운 것은 조합원 당사자들은 정작 직권 합의한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다. 2011년도 동서노조 임금협상 결과 발표 시에 그 어떤 곳에도 연봉제 도입에 합의 했다는 내용은 없었다.

노동조합이 민주성 자주성을 잃어버리면 어용노조 집행부가 회사와 밀실야합에 의해 조합원의 생존권을 통째로 팔아먹을 수 있다. 회사는 조합원 개개인 보다 노조 집행부를 관리함으로써 회사 맘대로 노동조건을 하락 시키는 도구로 사용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합의들이 일어나는지 조합원들은 모른 다는 사실이 우리를 더욱 공포스럽게 만든다.

자신의 임금과 권리가 어떻게 결정되고 있는지를 내 스스로가 모를 수 있다는 사실에 이제 우리는 공포를 넘어서 분노해야 한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는 이미 가슴속에 해답을 가지고 있다.

[발전노조 교선실]

노동자의 삶과 노동

국민의 대다수는 노동자다. 노동자는 고용이 되어야 삶을 이어갈 수 있다. 또 임금을 받아야 생활할 수 있다. 일을 할 수 없는 노동자들에게는 국가복지가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하기에 노동자의 삶은 고용'임금'국가복지로 결정 된다. 그러면 이것을 누가 결정하는가? 바로 국가와 자본가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의 삶은 바로 국가와 자본가에 달려있다. 북유럽의 복지국가들은 노동자의 기본생활을 국가가 보장해준다. 그 밖에 나라들은 자본가들의 세상이라 노동자의 삶은 그만큼 척박할 수밖에 없다.

1%를 지키는 새누리당

올해는 총선과 대선이 겹친 정치의 해다. 4.11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승리를 거두어 국회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였다. 5년 내내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의 모진 탄압을 견디고 있는 노동자들에게는 악몽 같은 현실이었다. 새누리당을 1% 가진자들의 정당이라고 한다. 이 당은 1%를 위해 부자감세하고, 그 1%가 99%의 노동력을 값싸게 이용하여 돈을 벌도록 비정규직과 저임금 체제를 법으로 만들어 왔다. 1%란 바로 노동자들의 노동력에 기생하는 자본가들을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새누리당을 반노동 자본가정당, 더 엄밀하게 부르면 대자본가정당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들은 보수정당이라고 포장하여 자신들의 계급적 본질을 감춘다. 이런 당이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 과반수를 차지했으니 노동자들의 앞날이 캄캄해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민주통합당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이 국가를 토건회사로 만들어 국토를 공사판으로 만들어 개판을 쳐도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는 야당이 있다. 바로 민주통합당이다. 왜 국민들은 새누리당에 신물을 내면서도 좀처럼 제1야당에 마음을 주지 못하는 것일까? 국민들의 정치의식이 낮아서 일까? 아니다 ! 그것은 민주통합당이 집권한 10년 동안 좋지 않은 기억들 때문이다. 한때는 국회 과반수 의석까지 가졌던 정당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국민들이 모아 준 그런 힘을 가지고도 아무 것도 하지 못하고, 10년 내내 고용불안, 저임금, 불만증폭으로 국민들을 피로하게 만들었다. 민주정부라고 하지만 우리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꿔나갈 경제민주화는 시도조차 하지 못하고 밀려났다. 이런 이유는 민주통합당이 중소자본가를 대변하는 비노동 중소자본가정당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시야에 국민의 다수인 노동자는 아지랑이처럼 애매하다.

▲ 2009년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직권상정 시 국회 본회의장 모습[미디어오늘]

▲ 거리정치로 불리고 있는 촛불시위

영흥화력 화학설비 외주용역 진행상황은?

남동발전은 지난 7월 주간경영회의 자료 중 "효율적 인력운영을 위한 화학직군 운영 개선 방안"을 통해 영흥화력 화학설비 외주용역을 "2012년 10월까지 관련규정 개정 및 비주력업무위탁용역 계약체결"이라는 구체적인 세부일정을 밝혔다.

수처리, 폐수처리, 연료분석 교대근무 전체를 외주용역 시키고, CPP(화학 내처리) 교대근무 8명을 4명으로 감축시키는 것으로, 교대근무 총 24명 중 5명만 남기고 19명을 감축시키겠다는 것이다. 인력감축이 수반된 구조조정에 대한 반발과 저항을 무마시키고자 건설 중인 영흥 5,6호기 탈황설비 운전에 12명을 배치한다는 복안을 제시했지만, 이미 위탁용역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존 1~4호기 탈황설비를 고려할 때 화학설비를 외주용역 시키기 위한 바꿔치기 카드가 분명하다.

다음 수순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5,6호기탈황설비 화학직군 직접 운영은 기존 1~4호기처럼 다시금 위탁용역으로 바

자정당 그리고 대선

좌초한 진보정당

노동자 중심의 정당이라고 민주노총의 배타적 지지까지 받은 민주노동당이 등장했다. 한때 지지율 10%, 국회의원 10명을 배출한 전성기가 곧 당의 정점이었다. 그것은 특정 당내 분파가 당권을 장악하고 패권을 행사하면서 당이 두 조각나면서 내리막길을 걸었다. 우여곡절 끝에 헤쳐모인 통합진보당은 좌로 나가야 할 진보정당을 우경화시켜 노동자 중심성도 버리고 정체성도 의심스럽게 만들었다. 지금 통합진보당이 경선부정 사태로 또 분당 수순을 밟고 있다. 진보신당은 총선 지지율 저조로 당이 해체되고 재창당을 준비하고 있다. 진보정당에 쏠렸던 국민들의 관심은 허공으로 흩어지고 있다.

성공한 개인을 대표하는 안철수 교수

의식 있는 국민들은 새누리당을 피하려고 민주통합당에 안겨보았으나 자리를 잡지 못했다. 민주노동당에도 시선을 돌려보았지만 오래가지 못했다. 이렇게 국민들의 정치경험은 상당한 근거로 기존정당에 대한 불신으로 나아간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은 혜성처럼 등장한 안철수라는 개인에게 시선을 집중하고 있다. 아직 가보지 않는 미지의 길, 과거가 없는 새로운 길, 뭔가 입지전적이고 깨끗할 것 같은 길에 국민들은 또 기대를 걸어보려 한다. 그러나 정작 안철수 교수는 자신을 민주나 진보로 자리매김하지도 않고 "상식"이라고 말한다. 그는 정직하게 성공한 사람들을 상징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성공하는 사람은 1%에 가깝다. 그가 개인이 성공하는 방법은 알 수 있겠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안정된 일자리와 적절한 임금을 주는 방법까지 알고 있을까? 국민의 다수인 노동자편을 들어도 쉽지 않은 과제인데, 오히려 그는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사이를 정치적으로 파고들고 있다.

노동자 삶의 질은 노동자정당의 힘과 비례한다.

노동자의 삶을 기본적으로 보장하는 복지국가라고 하는 나라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다. 그것은 노동조합을 기반으로 하는 정당(사회민주당, 노동당, 공산당 등)이 다수당이 되어 상당기간 집권하면서 노동자들의 고용과 임금, 국가복지를 법제도적으로 보장한다는 것이다. 즉 노동조합을 기반으로 하는 노동자정당이 얼마나 큰가에 따라 각 나라마다 노동자 삶의 질의 차이가 난다. 노동조합과 노동자정당의 힘이 가장 센 나라가 바로 북유럽 국가들이다. 그 다음으로 프랑스 등의 남유럽 국가들이다. 영국의 경우 노동당이 우경화하면서 국가복지가 상당히 축소되고 노동자들의 삶도 저하되었다. 미국에서는 한 때 잘나가던 노동운동이 자신의 독자적인 정당을 만들지 못하고, 민주당 정권에 매달리면서 거의 모든 노동자들이 자본주의 중심부 시장정글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 이와 같이 노동자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고용와 임금, 국가복지의 수준은 그 나라의 노동조합과 노동자정당의 힘의 크기에 정확하게 비례한다.

노동자는 자신의 독자적인 노동자정당을 가져야 한다.

새누리당은 박근혜를 대선후보로 선출하였다. 민주통합당은 새로울 것 없는 후보들이 경쟁하고 있다. 통합진보당은 아직 당내문제로 시끌벅적하다. 진보신당은 민중경선의 사회연대대선후보를 제안하고 있다. 또 한편으로 노동현장 활동가들이 노동자 계급정당을 만들자고 호소한다. 분명한 것은 노동자가 자신의 삶을 보장받고 향상시키려면 역사의 교훈처럼 자신의 독자적인 정당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자신을 착취하는 자본가 정당에 기대를 걸거나 불분명한 계급 정체성을 가진 개인이나 정당을 정치적으로 선택을 하는 것은 정치적 자살골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받을 고통은 가볍지 않다는 것이다. 12.19 대선을 앞두고 지나간 노동자정당의 세계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 노동자들이 대선에서 어떤 정치행위를 할 것인가의 문제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와 직결되어 있다.

뀔 것이며, 화학설비를 포함한 화학분석업무까지도 남동산하 전 사업장에서 외주용역(아웃소싱) 될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결국 회사는 발전소에서 화학직군이 전문적으로 직접 고용의 형태로 하는 업무를 모두 없애는 것이 목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동의 과반수 노조를 차지하고 있는 '남동노조'와 회사는 밀실에서 협의할 뿐 그 진행사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영흥화력 화학직군 운영 상황〉

구분(교대근무)	운영인원	변경(안)	변경인원	비 고
수처리	4	외주용역	▽4	#5,6 탈황운전 [제어실 4명]
폐수처리	4		▽4	
#1,2 CPP	4	#1-4 CPP 5명 [교대 4명, 통상 1명]	▽3	-
#3,4 CPP	4			
연료분석	8	외주용역	▽8	#5,6 탈황운전 [현장운전 8명]
-	24명	5명	▽19	12명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

김수행
성공회대 석좌교수

북한이 남한보다 살기가 좋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물론 ‘보통 사람’ 즉 민중의 살림살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남한의 민중이 보릿고개를 넘지 못해 기아선상에 헤매고 있을 때, 북한의 민중은 배부르게 먹고 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북한의 총생산이 규모면에서 남한의 총생산보다 컸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북한에서는 ‘고루고루 나누어 먹는 버릇’이 사회 전체적으로 확립되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시절은 1945년 해방 이래 1960년대 말까지 계속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시절에 남한의 국정 교과서나 대중매체는 “사람은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는 이야기를 지루하게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남한 민중은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지만, 북한 민중은 밥은 먹고 산다.”는 사실에 남한의 지배세력이 불안감을 느껴 북한체제를 폄하하기 위해 만든 선전 문구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물론 사람은 빵만으로는 살 수 없고 온갖 ‘자유’를 누려야 하는 것은 옳은 지적입니다. 이리하여 “북한에서는 인민이 모두 김일성의 노예이지만, 남한에서는 모든 국민이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선전 문구가 뒤를 따랐습니다.

북한 민중이 어떻게 사는지를 알 수 있는 책이나 사진이나 방송은 하나도 허용하지 않은 채 북한체제를 욕했기 때문에, 남한의 정치세력도 북한의 김일성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승만의 독재와 부정부패, 그리고 한 수 더 높은 박정희 군사정권의 독재와 부정부패는 남한 민중이 누린다고 광고 선전하는 ‘자유’가 무엇인지를 헷갈리게 했습니다. 이렇게 어리둥절한 민중으로부터 거의 모든 ‘자유’를 빼앗고 민중을 노예처럼 부려서 “빵만이라도 주겠다.”고 시작한 것이 재벌 중심의 경제개발계획이었습니다.

“사람은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고 고함치던 지배세력과 그 앞잡이들이 완전히 태도를 바꿔 “빵만 있으면 사람은 살 수 있다.”고 외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박정희를 ‘한강의 기적’을 낳은 ‘구국의 영웅’이라고 떠드는 패거리가 바로 이런 극우세력이고, 박정희 군사정권이 민주화에는 실패했지만 산업화에는 성공했다고 떠드는 지식인들이 바로 이런 아부세력입니다.

경제학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최고의 자유’는,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직접적 생산자인 노동자가 생산수단(공장, 토지, 기계 등)과 생활수단을 ‘자기의 것’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가리킵니다. 쉽게 말하면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노동자가 그 공장의 주인이 되는 것, 또는 노동자들의 생산 협동조합이 그 공장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생산자인 노동하는 개인은 즐거운 마음으로 자발적、헌신적、창의적으로 일하게 될 것이며, 이전의 자본가는 용역깡패를 동원해 노동자의 파업을 폭력적으로 저지하려는 사악한 마음에서 해방되어 보통 사람처럼 가뿐하게 자기의 전공분야에서 일하게 될 것입니다. 노동자가 해방되니 자본가도 해방되고 모든 인간이 해방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 선거철이 왔다고 중구난방으로 떠드는 ‘경제민주화’나 ‘분배’에 대한 모든 논쟁은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않게 됩니다.

이런 사회를 ‘자유로운 생산자들의 연합’이라고 부르는데, 물론 소련은 이런 사회의 곁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당 간부와 정부 관리가 생산수단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행세하여 경제를 자기 마음대로 계획하고 운영했으며, 직접적 생산자인 노동자는 아무런 실권을 가지지 않는 단순한 임금노동자로서 노동하는 것 그 자체를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혁신’이 일어나고 노동생산성이 향상되겠습니까? 결국 국영기업 사이의 경쟁을 통해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택하면서 자본주의사회로 되돌아간 것인데, 이 과정에서도 당 간부와 정부 관리는 거대한 자본가로 변신했습니다. 아마 북한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이런 전철을 밟기가 쉽습니다.

남한의 민중은 해방 이후 70년이 되지 않는 짧은 시간에 온갖 것을 보고 경험한 드문 인재들입니다. 함께 단결하고 힘을 모우면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빵에 흔들려 자기의 신념을 버리지 맙시다.”

〈현장소식〉

(동서)
- 5대집행부 전임발령 과정에서 부당징계를 받고 노동위원회에서 승소했던 동서발전 당진화력지부 박전익동지의 2차 특별인사위원회가 8월 20일 본사에서 열렸다. 결과는 원심과 동일한 정직3월이 나왔다. 노동조합은 부당징계에 대해 다시 노동위원회에 제소할 것이다.

(서부)
- 서부발전에서 인원감축을 시도하고 있다. 운영과장을 1호기당 1명 근무에서 2호기당 1명의 근무로 바꾼다고 한다. 또한 태안화력 경우 PGO 인력에 대해서 감축이 예상된다. 기능직이 수행하던 각종 펌프 포지션의 인원인 4명이 정년퇴직하면 다시 임시직으로 재취업 후 동일업무를 할 예정이다. 결국 인력충원을 하지 않고 기존 직원을 다시 비정규직으로 쓰는 형태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중부)
- 중부발전 보령화력에서는 근무자의 휴일을 사용하거나 퇴근이후의 시간을 활용하여 운전원 현장견학을 시행하려고 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회사가 요구하거나 필요로 하는 모든 교육은 근무에 해당된다. 근무를 서다 교육을 가라는 것은 당사자에게 무료노동을 강요하는 것이다.